

## 유럽통합의 진전에 따른 아일랜드 사회의 변화와 적응\* - 니나(Nenagh) 지방의 사례를 중심으로 -

황익주

강원대 인류학과 조교수

이 논문에서는 1973년 유럽연합에 가입한 이래 아일랜드 사회에서 전개되어 오고 있는 유럽통합의 진전에 따른 변화와 적응의 양상들을 경제구조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한다. 유럽통합의 영향이 가장 직접적이고도 심대하게 나타나고 있는 곳은 농업부문인데, 한마디로 유럽연합에의 참여는 아일랜드의 농업구조를 근대화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소농층의 몰락 추세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는 있지만, 유럽연합의 각종 구조정책 및 1992년 이후 도입된 직접보조금 제도 등이 소농층의 급속한 몰락에 대한 완충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에의 참여는 아일랜드의 산업발전을 가속시켜 아일랜드를 산업사회로 이행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는데, 오늘날은 유럽이 아일랜드가 필요로 하는 외국자본의 가장 큰 원천이자 아일랜드 공산품의 가장 큰 수출시장으로 되어 있다. 다른 한편으로 유럽연합에의 참여는 아일랜드의 광공업 부문이 지닌 높은 대외의존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로도 작용하였다. 유럽통합의 진전과정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입으면서 지속되어 온 아일랜드의 전반적 경제발전,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서의 계속된 고도 성장, 그리고 사회·문화적 측면들에서 유럽연합에의 참여가 매개요인이 되어 이루어진 각종의 발전의 양상들은, 현 시점에서 절대 다수의 아일랜드 국민들로 하여금 유럽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만들고 있다.

### 1. 서 언

1973년 1월 1일 자로 아일랜드 공화국은 유럽연합—당시의 명칭으로는 유럽경제공동체(EEC)—의 회원국이 되었다. 아일랜드가 영국 및 덴마크와 함께 EEC의 회원국이 된 사건 자체가 일찍이 1952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의 발족과 더불어 시작된 유럽통합의 진전과정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일랜드의 가입 이후로도 신규 회원국의 계속적 영입과 더불어 행해진 일련의 제도적 개혁들—예컨대, 유럽통화제도(European Monetary System)의 창설(1979년), 단일유럽법(Single European Act)의 발효(1987년), 단일유럽시장(European Single Market)의 출범(1993년 1월),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발족(1993년 11월), 그리고 이제 1999년 1월부터 시작될 유럽단일통화제도(European Single Currency)의 실시 등등—을 통해 전개된 유럽통합의 진전과정(장흥, 1994: Barnes & Barnes; 1995: ch. 1 참조) 속에서, 아일랜드는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문화

\* 본 논문은 1995년도 교육부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등 생활의 전 측면에 걸쳐 그 영향을 입으면서 변화와 적응을 해 오고 있다. 이같은 유럽통합의 진전과정 속에 편입됨에 따라 아일랜드 사회가 겪어 온 변화의 폭과 깊이가 너무나도 컸던 만큼, 아일랜드에 대한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1973년의 유럽연합 가입을 1922년 영국의 식민 지배로부터 독립한 이래 70여 년에 걸친 아일랜드의 역사에서 가장 의미심장한 사건—혹은 적어도 그러한 두세 가지 사건 중의 하나—으로 평가하는 데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Wilson, 1984: 9; Foster, 1989; Lee, 1989; Brunt, 1988; Ardagh, 1995).

본 연구에서는 유럽통합의 과정 속에 참여하게 된 이래로 아일랜드가 겪어 온 변화의 중요한 양상들을 니나(Nenagh)라는 아일랜드 중서부의 한 지방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같은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본 연구는 다음 두 가지의 방법론적 전제하에서 출발한다.

하나, 유럽연합에의 참여라는 사건 자체가 아일랜드 사회의 근대화 과정의 연장선에 위치하는 것이자 세계자본주의체제의 세계화(globalization) 과정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는 사실임을 고려할 때, 과연 유럽연합에 가입한 이래 아일랜드에서 일어난 변화들 중 어떤 양상들을, 그리고 그 중 얼마만큼을, 유럽통합의 진전에 기인한 영향으로서 근대화 및 세계화의 진전에 기인한 영향들로부터 준별해 낼 수 있는가 하는 물음과 관련된 전제이다. 유럽통합, 근대화, 세계화의 개념들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각각의 과정들이 아일랜드에 미친 영향들을 엄밀하게 준별해 내는 것은 본 연구자의 능력을 벗어나는 작업이다. 본 연구의 기본적 목표는 그보다는 개념상 훨씬 소박한 수준에서 유럽통합의 진전이라는 것이 아일랜드 사회의 보통의 구성원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어떠한 생활상의 변화들이 발생해 왔음을 함의하는가를 서술하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여년 사이에 아일랜드에서 발생한 변화의 양상들 가운데서 유럽통합의 진전이라는 국제적 수준의 변화추세에 기인한 것이라고 비교적 쉽게 인과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양상들을 중심으로 하여 분석을 전개하고자 한다.

다른 하나는 분석에 있어서 지방적 수준(local level)과 초지방적 수준(supralocal level) 간의 상호관계에 관련된 전제이다. 유럽통합의 진전에 따른 아일랜드 사회의 변화와 적응의 양상들 가운데는, 전국적 수준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양상임에도 불구하고 니나의 지방적 수준 혹은 니나 지방을 포함하는 지역의 수준에서는 별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또는 반대로 니나 지방의 수준에서는 두드러지게 중요한 양상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혹은 전국적 수준에서는 그렇지 않다든지 하는 등의 방식으로 분석의 수준들간에 불일치가 존재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아일랜드라는 나라 자체가 우리나라에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임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일랜드 전국적 수준과 니나 지방의 수준 모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양상들로 한정하여 분석하는 접근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러한 양상들 중에서도 지면상의 제약으로 본 논문에서

는 농업구조의 근대화 및 그에 대한 농민층의 반응, 산업화 과정의 대외 의존성 심화 및 그에 대한 반응 등의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전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해당하는 자료들, 즉 유럽연합 가입 이전 시기에 있어서의 아일랜드라는 나라 전체 및 니나 지방의 역사적·사회경제적·문화적 배경에 관한 자료들은, 본 연구자가 박사학위논문(Hwang, 1992) 작성을 위한 현지조사를 수행하던 1989년 1월부터 1990년 7월까지의 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수집된 것들이다. 그리고 본 연구의 골간을 이루는 내용인 유럽연합에의 가입에 따른 영향으로 생겨난 변화와 적응의 양상들, 특히 최근 들어 나타나는 양상들에 관한 자료들은 본 연구자가 교육부의 '95 해외지역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1995년 7월에서 8월중에 4주일과 1996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2주일 남짓한 기간에 두 차례에 걸쳐 수행한 현지조사를 통하여 주로 수집한 것들이다. 이 두 차례의 현지조사에서는 조사기간의 짧음으로 인하여 참여관찰의 기법은 구사할 수가 없었기에 주요 정보제공자와의 면담과 각종 문헌자료들의 수집을 주된 조사방법으로 삼았다.

## II. 유럽연합에의 가입의 역사적 배경<sup>1)</sup>

1930년대 초이래 아일랜드의 정권들이 계속적으로 추진해 온 경제발전 전략은 과거 식민중주국이었던 영국에 대한 전통적 의존관계를 종식시킨다는 의미로서의 '자립경제 건설'을 목표로 삼고, 수입대체 산업화를 통하여 농업사회이던 아일랜드를 산업사회로 변환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내자본의 형성이 안되어 있고 국내 시장 또한 매우 협소한 조건하에서 이같은 경제발전 전략의 한계점은 일찍이 1940년대 말부터 드러나기 시작하였고, 1950년대 중엽에 이르러서는 만성적 국제수지 적자와 높은 인플레이션과 실업율로 아일랜드 경제는 큰 어려움에 처하였다. 상황을 악화시킨 것은 점감하기는 커녕 점증하는 다른 서유럽 국가들과의 상대적 격차였다. 예컨대, 1949년부터 1956년 사이에 아일랜드의 GNP 총성장율이 8%에 불과하였던 데 반하여, 영국은 21%, 그리고 유럽경제협력기구(OEEC)에 속하는 유럽 본토의 국가들은 42%의 성장을 기록하였던 것이다. 이같은 열악한 경제상황은 1840년대의 대기근(Great Famine) 이래로 계속되어 이제는 국내의 경제상황이 어려울 때면 아일랜드인들이 흔히 의지하는 대응방안이 되다시피한 영국 및 미국으로의 이민을 다시금 급증시켜, 1950년대를 20세기 들어 가장 많은 수의 아일랜드인들이 이민을 나간 10년간으로 되게 하였다. 그 결과, 195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수입대체 산업화를 기적으로 하는 종래의 발전전략은 완전히 실패하였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었다.

이같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1959년부터 아일랜드 정부는 새로운 대외지향적 경

1) 이 절의 내용은 Lyons, 1973: part 4, ch. 4; Brunt, 1988: ch. 1; Foster, 1989: chs. 22 & 23; Breen et al., 1990; Ardagh, 1995: chs. 2 & 3 등을 참조하여 정리한 것이다.

개발전 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전략의 요점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는 이제까지 전적으로 영국 시장만을 상대로 수출하던 아일랜드 농산물의 판매시장을 보다 가격이 좋은 유럽 시장으로 확장시킴으로써 농업생산을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영농의 기계화를 증대시키고 소규모 농장들을 병합하여 큰 규모의 상업적 농장들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럴 경우 농업 부문의 고용능력은 더욱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농업부문에서 배출되는 잉여노동력을 광공업 부문의 팽창을 통해 흡수한다는 것이 새로운 전략의 두 번째 요점이다. 하지만 국내자본의 형성이 미약하고 국내시장이 협소하므로 외국자본들을 유치해서는 그들로 하여금 해외시장을 겨냥한 수출업체들을 설립할 수 있도록 각종의 유인들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일랜드 정부는 이같이 대외지향적 경제발전 정책으로 선회하는 연장선에서 일찍이 1961년에 EEC에의 가입을 신청한 바 있다. EEC 가입은 영국에의 엄청난 경제의존도—1960년 현재 아일랜드 수출의 75%, 수입의 50%가 영국을 상대로하여 이루어졌다—를 낮출 수 있다는 의미에서 아일랜드인들의 민족주의적 감정도 합치하는 일로서 환영되었다. 그러나 영국 및 덴마크와 같은 해에 이루어졌던 아일랜드의 가입 신청은 드물어 이끄는 프랑스가 영국의 가입을 거부함에 따라 더불어서 무기한 연기되어졌다. 1967년에도 아일랜드는 영국 및 덴마크와 더불어 EEC에 가입을 신청하였지만, 또다시 영국에 대한 프랑스의 거부로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다.

비록 EEC에의 가입은 성사가 되지 않았지만, 아일랜드의 대외지향적 경제발전 정책은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그리하여 1960년대를 통하여 아일랜드의 경제는 연평균 경제성장률 4%, 광공업 생산 증가율 7%, 광공업 제품 수출 증가율 18%에 이르는 당시까지의 아일랜드 역사상 유례가 없는 고도성장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성공은 자본주의 세계경제체제의 유리한 환경에 크게 힘입은 것이었다. 즉, 아일랜드의 새로운 대외지향적 발전전략의 성공의 관건이 되는 외국자본 유치가 순조로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1960년대의 번영은 보다 나은 삶의 기회를 찾아 이민길에 오르는 아일랜드인들의 숫자도 크게 감소시켜, 1960년대는 대기근 이래 120년만에 최초로 아일랜드의 총인구가 증가한 시기로 기록되었다.

1960년대의 이같은 성공을 배경으로 아일랜드 정부는 프랑스의 영국 가입에 대한 거부기가 이미 철회되어 있는 상태에서 1972년에 EEC 가입조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국민투표를 통해 83%의 압도적 지지로 승인되었다. 그리하여 1973년 1월 1일 자로 아일랜드는 EEC의 회원국이 되었으며, 5년간의 과도기를 거쳐 1978년부터는 역내의 다른 국가들과 아무런 관세장벽이 없이 무역하는 온전한 회원국이 되었다.

### III. 농업구조의 근대화와 농민들의 반응

농업부문은 아일랜드의 산업부문들 가운데서도 유럽통합에 의한 영향이 가장 직접적

이것도 가장 심대하게 나타나는 부문이다. 1930년대에 미국인 인류학자 아렌스버그(Arensberg)와 김벌(Kimball)은 가족노동에 기초한 혼합영농을 행하며, 자급자족을 위주로 하고 부분적으로만 시장경제 체계에 통합되어 있는 농민사회(peasant society)의 모습을 아일랜드 농촌의 전형적 상으로서 제시한 바 있었다 (Arensberg & Kimball, 1940; Arensberg, 1937). 그들의 이같은 해석에 대해 근본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학자들(예컨대, Gibbon(1973))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농민사회론 모델이 공시적(synchronic) 관점에서는 1930년대 아일랜드 농촌사회의 성격을 포착하는 데 타당성이 크며, 나아가 1950년대까지도 특히 서부 아일랜드 지역의 경우에는 근대적인 기업농이라기 보다는 전통적인 농민의 모습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Hannan, 1982 참조). 그러나 유럽연합에 가입하여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의 적용을 받게 된 지 20여 년이 지난 오늘날의 아일랜드 농업과 농촌의 모습은 아렌스버그와 김벌이 묘사했던 바와는 엄청나게 달라져 있다. 이하에서는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의 영향하에서 아일랜드의 농업구조에 발생한 변화와 그에 대한 농민들의 반응양상들을 서술하고자 한다. 그런데 UR협상의 타결에 대비하기 위한 공동농업정책의 대대적 개혁이 지난 1992년에 이루어졌음을 감안하여, 여기서는 1992년 이전과 이후의 두 시기로 나누어 서술을 전개할 것이다.

#### 1. 유럽연합에의 가입과 아일랜드 농업구조의 근대화: 1973년-1992년

한마디로 말해서 유럽연합에의 가입은 아일랜드의 농업을 근대화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사실상 아일랜드가 1960년대 초부터 유럽연합에 가입을 원했던 가장 큰 동기 자체가, 1950년대 말 이래로 새로이 대외지향적 산업화 전략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 당시 까지도 아일랜드 경제에 있어 단일 산업부문으로서 단연코 가장 비중이 컸던 농업부문을 근대화하는 데 필요한 자원들을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되어 공동농업정책의 혜택을 입음으로써 직·간접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 데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Commins, 1995: 178-180).

1973년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된 이래 아일랜드 농업부문에서는 매우 높은 생산성 증대와 농민 소득수준의 향상이 병행적으로 진행되었는데, 특히 1973년부터 1979년 제2차 오일쇼크로 세계경제가 불황에 빠져 들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생산성 증대와 농민 소득수준의 향상 속도는 아일랜드 농업 역사상 유래가 없던 눈부신 것이었다. 그리하여 1978년의 농가 가구당 실질소득은 1970년에 비해 두 배로 증가하였을 뿐더러, 농업부문 종사자 1인당 평균소득도 1970년에는 광공업 부문 종사자의 80%밖에 안되던 것에서 1978년에는 109%로 급증하여 광공업 부문 종사자의 평균을 넘어서게 되었다 (Commins, 1995: 182-3).

이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유럽연합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아일랜드 농민들이 그들의 생산물을 종래의 유일하다시피 한 수출시장이던 영국보다 상대적으로 가

격이 높은 유럽시장을 상대로 팔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동농업정책에 따른 농산물 가격보장(예컨대, 우유의 경우)과 수출보조금(예컨대, 육류의 경우) 제도에 의해 이윤의 안정성까지도 보장을 받았던 덕택이다. 유럽연합의 농업기금을 재정적 기반으로 하여 운영되는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 아일랜드의 농업 부문은 유럽연합으로부터 막대한 액수의 지원금을 수혜받았는데, 그 금액은 예컨대 1978년의 경우 4억 4800만 파운드(Ardagh, 1995: 97)로서 GNP의 5.7%(NESC, 1989: 표 4.18)에 달하였으며, 1990년대 초의 경우 연간 약 13억 파운드에 이르렀다(Commins, 1995: 180). 또 비율적으로도 이 두 제도를 통해 받은 지원금은 1973년부터 1986년 사이의 기간의 경우 아일랜드가 유럽연합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총액의 81%에 달하고, 이후 1990년대 초까지는 총액의 약 3분의 2에 달하는 엄청난 높은 비율이었다(Commins, 1995: 180).

공동농업정책의 위와 같은 가격관리제도의 존재가 개별 생산농민에게 있어서 가지는 함의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생산성을 증가시켜 보다 많이 생산해 내기만 하면 일정한 이윤율이 보장된 가격으로 생산물을 모두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같은 함의는 유럽연합의 모든 회원국 농민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었고, 그것은 조만간 농산물의 과잉생산, 또 시장가격보다 높게 인위적으로 책정된 가격을 농민들에게 지급하고 계속 늘어만 가는 과잉농산물을 매입하여 비축해 두는 데 따른 재정부담 및 그에 대한 비농업부문 납세자들의 반발에서 연원하는 정치적 부담을 유럽연합에 초래하였다. 이같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유럽연합에서는 1970년대 말부터 각종의 규제조치들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1980년대 중엽부터 실시되기 시작한 것으로 특정 농산물들을 정해진 양 이상으로 생산한 농민에 대해서는 과잉생산분에 대해 과징금(levy)을 부과하는 제도와 우유같은 특정 농산물에 대해 개별 생산자들에게 생산량 쿼타를 배정하여 쿼타를 가진 사람만이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등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제조치들의 실시에 따른 가격 및 이윤 압박에 대해서도 개별 농민들은 생산성을 더욱 높여 총 이윤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처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농업생산 과잉의 문제가 심화되어 갔다(Commins, 1995: 188-8).

요컨대, 유럽연합에의 가입 이후 영농의 합리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아일랜드 농민들의 노력은 가속화되었다. 이같은 노력은 주로 기계화의 증대 등과 같은 자본집약적 방식으로 이루어졌고(Brunt, 1988: 21), 농민들은 이에 필요한 자본이 부족할 경우 기꺼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에 의존하였다. 그리고 보다 효율성 높은 기계장비를 사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영농을 하기 위해서는 경지면적의 확장도 필요한 일이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업가적 정신이 강한 농민들은 수십 년간 계속되어 온 젊은층들의 이농 현상의 결과로 더 이상 농사일을 가업으로서 계속할 수 없게 된 노년층 농민들의 토지들을 매입하는 방식에 주로 의존하여 자신들의 농장의 면적을 확장시켜 나갔다. 그 결과, 농업부문 종사자의 총수는 1971년 약 28만명에서 1991년에는 약 16만명으로 격감한 반면, 평균 경지면적은 1971년 약 40에이커(약 15ha)에서 1991년 약 65에이커(약

26ha)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경지면적 30에이커 미만의 농가 비율이 1971년에는 35%인 반면 100에이커 이상의 농가는 13%에 불과하였으나, 1991년에는 30에이커 미만 농가의 비율은 21%로 감소한 반면 100에이커 이상 농가의 비율은 18%로 증가하였다 (*Census of Population, 1971 & 1991*). 즉, 아일랜드 농업에서 19세기 말 이래로 지속되어 온 소농의 소멸추세는 유럽연합에의 가입을 계기로 더욱 급속히 진전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아일랜드 농촌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 농민의 상은 이제 더 이상 자급자족적 혼합영농을 위주로 하는 소농으로서의 'peasant'가 아니라, 시장생산 그것도 해외 시장에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활동에 임하면서 많은 액수의 자본을 차입해서라도 보다 큰 이윤획득을 추구하는 근대적 기업농으로서의 'farmer'로 바뀌어졌던 것이다. 그렇지만 경영의 형태에 있어서는 여전히 유럽연합의 회원국들 중 가장 높은 비율로 가족농이 지배적 형태를 이루고 있다 (Government of Ireland, 1995: 95; Brunt, 1989: 21).

전통적으로 대농의 비율이 서부 아일랜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낙농 및 육우 사육 지역이었던 니나 지방의 경우, 농민들은 유럽연합에의 가입이 가져다 준 기회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영농을 근대화시켜 나갔다. 또한 그에 따른 부수적 결과로서 농가당 농지면적의 확대도 많이 진전되었다. 그리하여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1년에만 해도 니나 지방이 속하는 북부 티퍼래리 카운티(County North Tipperary)에서 전체 농가의 약 15%에 달하던 30에이커 미만 소농들은 1991년에는 5% 남짓한 비율로 감소한 반면, 100에이커 이상의 농지를 보유한 농가는 1971년의 약 19%에서 1991년에는 약 36%로 늘어났다. 니나 지방에서는 현재로서는 100에이커 정도는 대농이라는 범주에 들지조차 않는 실정이다.

농지면적의 확대와 더불어 농업기계화도 크게 진전되었으며, 특히 낙농과 관련하여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신축, 확장, 혹은 현대화도 많이 진전되었다.

<표 1> 북부 티퍼래리 카운티의 농지구모별 농가수 분포, 1926년 - 1991년

농지구모 (에이커)	1926년 ( % )	1961년 ( % )	1971년 ( % )	1991년 ( % )
0~15	869호 (14.6%)	285호 ( 5.4%)	201호 ( 4.2%)	37호 ( 1.1%)
15~30	1,209호 (20.3%)	704호 (13.4%)	503호 (10.6%)	148호 ( 4.4%)
30~50	1,413호 (23.8%)	1,380호 (26.3%)	1,066호 (22.4%)	523호 (15.7%)
50~100	1,568호 (26.4%)	1,770호 (33.7%)	1,902호 (40.0%)	1,488호 (44.8%)
100~200	654호 (11.0%)	910호 (17.3%)	667호 (14.0%)	928호 (30.0%)
200 이상	230호 (13.9%)	199호 ( 3.8%)	236호 ( 5.0%)	195호 ( 5.9%)
규모불명	130호	6호	11호	56호
농가총수	6,073호	5,254호	4,765호	3,375호

\* 출처: *Census of Population*

그러나 1992년의 개혁 이전의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이 가격 및 시장정책에 치우쳐 실행됨으로 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보다 생산량이 많고 생산성이 높은 농민들에게 보다 유리하고 따라서 소농의 몰락을 조장하는 측면이 두드러지기는 했지만(Shutes, 1991 참조), 공동농업정책에는 그 외에도 '구조정책'(structural policies)이라는 소농들에 대한 재분배 정책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또다른 구성요소들이 있었다. 그 가운데서도 아일랜드의 맥락에서 큰 중요성을 띤 것은 이른바 '낙후지역'(Less Favoured Area)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었다 (Commins, 1995: 186). 이들 낙후지역의 농민들에게는 사육하는 소나 양의 머리수당 얼마씩의 보조금—이를 'headage payments'라고 부른다—이 해당 농산물의 가격과 관계없이 지불될 뿐만 아니라, 기타 농업시설 개량 등에 필요한 자금이 유럽의 농업기금으로부터 지원된다. 낙후지역에 대한 유럽연합으로부터의 이같은 지원은 아일랜드의 소농들이 농촌에 잔존할 수 있게 하는 데 일조를 하였다. 위에서 유럽연합에의 가입 이후 농지합병에 의한 농장규모의 확대가 상당 정도로 진전되었음을 언급하기는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전속도는 농업구조 근대화를 추진하는 사람들의 기대에는 크게 못 미쳤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Hannan & Commins, 1992: 81-5; Commins, 1995: 187). 이는 농사일을 이어 받을 자녀가 없는 늙은 농민들<sup>2)</sup>을 포함한 낙후지역 내의 다수의 소농들이 보유농지를 매각하지 않은 채 농민으로서의 생활을 지속해 나가게 하는 데 있어서 유럽연합의 구조정책에 의한 지원이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 2. 1992년의 공동농업정책 개혁과 그에 대한 농민들의 반응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농산물 가격관리제도를 근간으로 한 종래의 공동농업정책이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매우 고조되었다. 이러한 비판의 요지를 간략히 정리해 보면, 이미 농업생산력이 과잉된 상태임에도 보다 집약적인 영농을 유발하여 과잉생산의 심화와 농촌 지역의 환경 오염을 조장하고, 세계시장 가격에 비해 훨씬 높은 유럽연합 농산물 가격수준의 유지를 위해 과잉농산물을 매입하여 비축해 두는 데 유럽연합의 전체 예산에서 70%에 달하는 막대한 액수의 농업기금이 낭비되고 있으며, 농민층 내에서도 가난한 소농들보다는 부농들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는 반면 막대한 예산의 재원의 대부분을 비농업부문 종사자들이 내는 직접세나 간접세로 조달하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더구나 UR 협상과 더불어 세계 무역의 질서가 보다 자유로운 가격경쟁 체제의 수립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종래의 가격 보조금 지원을 기축으로 하는 정책을 고수할 수는 없게 되었다. 1992년의 공동농업정책 개혁안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아일랜드 출신의 유럽 농업 커미셔너인 레이 맥셔리(Ray MacSharry)에 의해 입안되었다 (NESC, 1992; Commins, 1995:

2) 이들 중 상당수는 신부감을 찾지 못하여 평생을 혼인하지 못한 채 독신으로 지내는 사람들이다. 아일랜드 서부 지역의 농촌에서는 20세기를 통하여 이같은 평생 독신자 농민들이 유럽 전체에서도 단연 가장 많은 비율로 존재해 왔다 (Scheper-Hughes, 1979: ch. 2 참조).



188-9; Ardagh, 1995: 93-104).

1992년의 공동농업정책 개혁의 요체는, 각종의 가격 보조금 지원을 단계적으로 대폭 삭감하는 한편 키타량의 감축이나 보다 조방적인 영농방식으로의 전환 등의 방식으로 과잉생산력의 축소를 유도해 나가는 대신에, 그로 인하여 발생하리라고 예상되는 농산물 가격 하락 및 생산량 감소에 따른 농민 소득의 감소분에 상응하는 돈을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소득보조금으로 지급하며, 그 주된 수혜대상 계층은 낙후지역의 저소득 농민층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낙농업 및 육류를 얻기 위한 목우나 목양이 농업의 주축을 이루는 아일랜드의 맥락에서 이같은 직접보조금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우유생산 키타량이 삭감되거나 자발적으로 감축 혹은 반납하는 농민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보상금과 사육하는 소나 양의 마리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각종의 지원금이다. 직접지불금의 또하나의 큰 구성요소는 'set-aside'로 불리우는 지정휴경지 제도로서 이는 'tillage farmer', 즉 곡물이나 채소류 재배농들을 위한 것이다. 이 제도에 따라 농민들은 자신들의 농지 중 약 3분의 1까지에 해당하는 농토를 휴경 상태로 두는 대신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NESC, 1992 참조).

1992년의 공동농업정책 개혁의 골간을 이루는 위의 제도들 외에도, 소위 '부수적 조치'(Accompanying Measures)로 불리는 제도들도 도입되었다. 여기에는 보다 환경친화적 영농을 위한 것이라고 간주되는 매우 광범위한 활동들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농촌환경보호제도(Rural Environment Protection Scheme), 농지의 일부를 전용하여 나무를 심어 가꾸는 사람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조림장려금제도(Forestry Scheme), 그리고 농장을 자식에게 상속하고 은퇴하는 만 55세 이상의 농민에게 유리한 조건의 연금을 지급하는 조기은퇴제도(Early Retirement Scheme) 등이 있다 (Department of Agriculture, Food and Forestry, 1995 참조).

이상과 같은 내용의 공동농업정책 개혁안에 대한 아일랜드 농민들의 반응은 현재까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아일랜드산 농산물들의 시장가격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예측했던 만큼 하락하지 않고 있기—심지어 우유, 쇠고기, 보리 등의 품목은 가격이 오히려 미세하게나마 상승하였다고 한다—때문이다. 즉, 시장가격의 예상되는 하락폭에 맞추어 직접보조금의 비율을 책정해 놓았는데, 가격보조금은 단계적으로 삭감해 나가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 시장가격은 예상했던 폭만큼 하락하지 않았으므로, 농민들은 농산물의 판매에서 얻어지는 이윤에 덧붙여 애초에 약속된 대로 직접보조금을 지급받게 됨으로써 이중으로 수익을 올리게 되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동농업정책 개혁의 기본적 방향이 이미 잡혀진 1980년대 후반부터 아일랜드의 농민단체들은 가축 한 마리당 지불되는 보조금의 액수를 높이고, 아일랜드 국토의 보다 넓은 부분을 '낙후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하고자 강력한 로비활동을 벌여 성공을 거두었다. 즉, 전 국토의 60%가 '낙후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던 것을 72%로 확대시킴으로써, 총 16만 명의 아일랜드 농민들 중 12만 명이 보유 가축 마리수당 일정액으로 지급되

는 직접보조금의 수혜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Commins, 1995: 192).

공동농업정책 개혁안 입안자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진전된 이상의 호조건들의 덕택으로 아일랜드의 농민들은 1992년이래 현재까지 역사상 유례가 없는 번영기를 구가하고 있다. 그리하여 1992년이래 1995년까지 사이에 농민들의 실질소득은 13%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sup>3)</sup> 또한 소위 보완조치들에 대한 호응도 높아서 1994년부터 실시되기 시작한 조기은퇴제도의 경우는 예상보다도 빠른 속도로 수용되고 있으며, 농촌환경보호제도와 조림장려금제도에 대한 관심도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sup>4)</sup> 직접보조금제의 도입 이후로 아일랜드의 농가들의 소득에서 유럽연합으로부터 지급되는 각종의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대해서, 1992년에는 평균적 농가의 경우 소득의 30% 정도이던 것이, 1994년에는 41%, 그리고 1995년에는 약 절반에 이르게 되었다.<sup>5)</sup> ‘낙후지역’에 위치한 영세농가의 경우에는 직접보조금이 소득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뿐만 아니라, 직접보조금 혜택의 존재로 하여 농지가격이 상승함으로써 농민들에게는 재산을 증식시키는 부수적 혜택도 가져다주고 있다.<sup>6)</sup>

이상의 사실들은 1992년의 개혁의 결과로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은 이전보다도 더욱 강력하게 아일랜드 농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촌환경보호제도가 적용되는 활동들의 광범위함이나 조기은퇴제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의 영역을 넘어서서 아일랜드 농민들의 생활양식 전반에 걸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이상의 사실들은 새로운 공동농업정책이 기본적으로는 종전의 공동농업정책과 마찬가지로 아일랜드의 농업을 보다 젊은층의 사람들이 보다 대규모의 농장을 가지고 보다 기업가적인 태도로 영농에 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업구조의 근대화를 진전시키는 효과를 지닌 것이긴 하지만,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소농들이 농외 취업에 의존하지 않고도 잔존할 수 있게 해주는 효과도 동시에 지님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일랜드 농민들 가운데는 이같은 번영에도 불구하고 공동농업정책 개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도 비록 소수파이지만 존재하고 있다. 그 중 한 부류는 현재의 상황은 오히려 예외적인 것이며, 곧 농산물의 시장가격은 개혁입안자들이 예상했던 수준대로 하락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는 세계 농산물 시장에서 가장 경쟁력이 강한 호주나 뉴질랜드, 미국 등의 농민들과 정면으로 가격경쟁을 하는 날이 도래하게 될 것인 바, 그때에는 경쟁력에서 뒤지는 대다수의 아일랜드의 농민들은 단지 유럽연합이 제공하는 직접보조금만으로 생계를 꾸려 나가야 하는 존재로 영락하고 말리라고 예측하

3) 이는 Nenagh의 지방신문 *The Guardian*의 1996년 1월 6일자 기사에 인용된 아일랜드 농업 경제학자 Seamus Sheehy의 분석결과를 재인용한 것이다.

4) *The Guardian*의 1995년 9월 16일자, 11월 25일자 및 1996년 1월 6일자 보도기사 참조.

5) *The Guardian* 1995년 11월 18일 및 1996년 1월 6일자 보도기사 참조.

6) 1995년의 경우, 전국의 평균 농지매매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17%가 인상되어 에이커당 2,572파운드에 이르렀다고 한다. *The Guardian* 1996년 1월 13일자 보도기사 참조.

는 사람들이다. 또 한 부류의 부정적인 견해의 보유자들은 경제적인 이유에서 보다는 문화적인 이유에서 직접보조금의 취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종전의 보조금은 농산물 가격 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농민들로서는 자신들의 생산물을 팔고 그 값을 받는 것일 뿐이라고 느껴졌던 반면, 새로이 등장한 직접보조금이라는 형태는 생활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되는 생활보조금 같은 것으로 느껴져서 농사꾼으로서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다는 의미에서 이에 반감을 표하고 있다. 각종의 직접보조금은 '우편으로 배달되는 수표'(cheques in the post)라고 흔히 불리우는데, 그러한 지불형식이 마치 실업자나 은퇴노인들에 대해 주어져 온 복지수당을 받는 듯한 느낌을 자아낸다는 것이다. 또한 지정휴경지체나 농촌환경보호제에 따른 보조금들의 경우에는, 농사꾼으로서 당연히 더 많은 산출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더 적은 산출, 심지어는 전혀 생산적 용도로 땅을 활용치 않았다 하여 돈을 받는 셈인데, 이 역시 농사꾼의 전통적인 관념으로는 소화키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니나 지방의 한 농민단체 지도자에 따르면, 이같은 이유로 직접보조금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거의 노년층에 한정되어 있으며, 그들과 달리 농사일을 하나의 생활양식이 아니라 단순히 사업으로 간주하는 젊은 층은 어떤 형태로든 보조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환영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노년층 농부들도 직접보조금을 받는 것을 자연스럽게 수용하게 되리라고 전망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 IV. 산업화 과정의 대외의존성 심화와 그에 대한 반응

앞에서 논의한 농업구조의 근대화는 아일랜드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되어 가는 전반적인 산업화 과정의 일부이다. 1950년대 말부터 급속도로 진전되기 시작한 산업화의 결과로 오늘날의 아일랜드 사회는 완전한 산업사회로 변모하였다 (Goldthorpe & Whelan, 1992 참조). 그러한 변화의 가장 단적인 지표로서,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오늘날은 8분의 1 정도만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표 2> 참조).

<표 2> 아일랜드의 산업부문별 종사자 구성비 변화추세, 1961-1991

년 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1961	36.0 %	24.6 %	39.4 %
1971	25.9 %	30.6 %	43.5 %
1981	16.6 %	32.2 %	51.3 %
1991	13.7 %	27.3 %	59.0 %

\* 출처: *Census of Population*

이러한 산업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1973년의 유럽연합 가입은 아일랜드가 1950년대 말부터 취하기 시작한 수출지향적 산업화 전략의 귀결이었을 뿐만 아니라, 산업화 과정의 대외의존성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제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50년대 말부터 수출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화 전략으로 선회한 아일랜드 정부는 그에 필요한 자본을 외국자본의 직접투자 유치를 통해 조달코자 하였다. 하지만, 지리적으로 유럽의 서쪽 변경에 위치한 섬나라일뿐더러 국내시장의 규모도 지극히 협소한 아일랜드로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유인을 제공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한 유인들 중 단연코 비중이 컸던 것은 수출부문에 종사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이었다. 즉, 1958년에 처음 도입된 ‘수출이윤면세제도’(Export Profit Tax Relief)를 통해서, 수출거래에서 생성된 모든 이윤에 대해서 1990년까지 최장 15년간에 걸쳐 완전히 면세해 줄 뿐더러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본국으로 자유로이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파격적 혜택을 제공했던 것이다. 훗날 이 제도는 유럽연합의 판정에 따라 폐지되고 대신에 1981년부터 제조업 및 국제서비스업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게는 10%의 인하된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제도가 시행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이 10%의 법인세율 역시도 국제기준으로 보면 매우 낮은 세율이어서 외국자본에게는 대단히 매력적인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O'Malley, 1992: 39; Brunt, 1988: 5), 이윤을 본국으로 무제한 송금할 수 있는 자유는 여전히 주어지고 있다. 이 외에도 공장부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 가치의 60%에까지 달하는 현금보조금, 그리고 100%까지 달하는 종업원 훈련비용 보조금 등의 재정적 유인들이 더 있다 (Government of Ireland, 1995: 101).

이상의 제도화된 유인들 외에 아일랜드가 그 나라로 진출하는 외국자본에게 제시하는 유인들 중에는 우선 양질의 노동력의 존재가 있다. 유럽기준으로는 임금수준이 낮은 편이면서도 교육수준이 높고, 비교적 순응적이며, 더구나 아일랜드로 진출한 외국 기업들, 특히 아일랜드가 대외지향적 산업화 전략으로 선회한 직후인 1960년대 및 1970년대 초반 사이에 아일랜드로 진출한 외국기업들 중 다수를 이루던 미국계 기업들<sup>7)</sup>의 입장에서 보면 영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노동력의 존재는 상당히 매력적인 유인으로 작용하였다 (Ardagh, 1995: 74). 또한 비록 변경이기는 할지라도 아일랜드가 서유럽의 일부라는 입지조건 자체도 유럽시장에의 접근을 피하는 미국을 필두로 한 비유럽 국가들의 자본들에게는 아일랜드가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이전부터 중요한 유인으로 작용하였다 (O'Malley, 1992: 39).

이상과 같은 유인들을 통해 외국자본의 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진 결과, 아일랜드 제조업 부문에서 외국자본이 지니는 비중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증대하여 왔다.<sup>8)</sup> 그리하여 오늘날은 전체 제조업 종사자의 45% 가량이 외국기업체에서 일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체

7) 이들 중 상당수는 아일랜드계 혈통을 지닌 미국인 소유의 기업들이었다.

8) 여기서 제조업 부문을 가지고 논의를 주로 전개하는 까닭은 아일랜드가 2차산업 부문 중 광업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들에 의한 생산액은 제조업 총생산액의 55%에 달하고(Government of Ireland, 1993: 38), 특히 제조업 부문 수출액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Government of Ireland, 1995: 101). 이같은 수치들은, 총수출액이 오늘날 아일랜드 GNP의 70%가 넘고, 총수출액 중 제조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80%가 넘는다는 사실(Statistical Abstract 1995: 표 6.7 & 11.3 참조)을 배경으로 고려한다면, 현대 아일랜드 경제구조에서 외국자본에 의해 설립된 제조업체들이 가히 결정적이라 해도 좋을 만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음을 말해 준다.

1995년 현재 1,078개에 달하는 외국 제조업체들을 국적별로 분류해 보면, 가장 많은 것은 미국으로 약 400개이며, 영국이 약 210개—그 중 약 50개는 북아일랜드의 기업들이다—로 2위, 이어 독일이 약 180개로 3위, 그 다음이 스웨덴(40개), 일본(38개), 프랑스(35개)의 순으로 나타난다 (Government of Ireland, 1995: 101). 이같은 분포상황은 다음의 두 가지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첫째는,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미국 기업이 유치된 외국기업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데 반하여, 현재는 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들로부터 유치된 기업들의 수가 미국 기업의 수를 능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유럽연합에의 가입 이후로 유럽이 아일랜드 제조업 부문이 필요로 하는 외국자본의 가장 큰 원천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유럽연합의 회원국들 가운데서도 독일, 스웨덴, 프랑스 등 유럽 본토 국가들의 자본에 의해 설립된 업체들의 수가 영국계 업체들의 수를 능가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유럽연합에의 가입을 통해 영국에 대한 경제적 종속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아일랜드인들의 민족주의적 기대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실현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외국자본에 의해 설립된 기업들의 성장과는 대조적으로 아일랜드 국내자본에 의해 설립된 제조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정체 내지 몰락의 길을 걸었다. 이들 기업들은 종래에 수입대체 산업화를 위해 국내 기업들에게 제공되던 각종의 보호장치들이 점차 폐지되면서 수입상품이 증가함에 따라 협소한 국내시장에 대한 점유율마저도 감소되는 현실에 직면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보호무역주의의 제도적 장치들이 본격적으로 폐지되기 시작한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말까지 국내 제조업 부문에서는 고용량이 정체되어 있다가, 1980년대의 초반 및 중반기를 통해서는 고용량이 27% 정도까지 크게 감소하였다. 국내 기업들 가운데서도 농산물 가공업 같은 부문은 변화된 환경에 비교적 잘 적응해 나간 반면, 국제 경쟁이 심한 품목들을 생산하던 아일랜드 기준으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들이 급속히 몰락하였다 (O'Malley, 1992: 34-8).

대외지향적 산업화 전략의 당연한 귀결이겠지만, 해외무역은 절대량에 있어서 엄청나게 증대되었다. 그리하여 대외지향적 산업화 전략에 기반하여 수립된 제1차 경제개발계획(Programme for Economic Expansion, 1959-1963)이 시행되기 전야인 1958년의 총수출액이 1억 3천만 파운드, 총수입액이 1억 9,900만 파운드였던 데 비해, 유럽연합 가입 전야인 1972년에는 그 액수가 각기 6억 4,700만 파운드 및 8억 3,800만 파운드로 증가하였으며, 다시 1994년에는 총수출액이 227억 8,900만 파운드(342억 달러), 총수입액은 171

억 9,100만 파운드(258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Statistical Abstract 1995: 표 6.1). 절대량 증가보다도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해외무역이 아일랜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유럽연합에의 가입 이래로 그러한 증가추세는 가속화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1960년에는 국내총생산(GDP)에 대비하여 본 수출과 수입의 비율이 31.8%와 37.3%였고, 1972년까지만 해도 각기 34.6%와 39.9%로서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던 데 비하여(NESC, 1989: 표 4.6), 1995년에는 각기 71%와 52%<sup>9)</sup>로 급증하였던 것이다.

유럽연합에 가입하게 된 후로 아일랜드의 무역에서 유럽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급증하였다. 그리하여 1972년까지만 해도 수출시장의 61%와 수입시장의 51%를 점유하던 영국의 비중이 1994년에는 각기 28%와 36%로 감소한 반면, 영국과 1995년에 신규 가입한 오스트리아·핀란드·스웨덴 등 4개국을 제외한 유럽연합의 나머지 10개국은 수출시장의 40%와 수입시장의 21%를 차지하게 되었다 (Government of Ireland, 1995: 103; NESC, 1989: 79 참조). 이는 아일랜드로 유치되는 외국기업의 수에 있어서 영국을 제외한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비율이 영국을 능가하게 된 사실에 더하여, 유럽연합에의 참여가 아일랜드의 영국에 대한 경제적 종속성을 탈피하는 계기로 작용하여 왔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실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외국자본의 직접투자 유치를 주축으로 한 산업화 전략이 아일랜드 경제에 수출 증대, 경제 성장, 영국에의 의존도 완화 등과 같은 긍정적 결과를 가져다 준 점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전략이 지닌 문제점들도 지적되어 왔다. 그 중 주요 문제점으로 언급되는 것들을 들어 보면, 첫째는 아일랜드에 도래한 외국기업들이 거의가 수출을 위한 최종 가공단계의 작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들이어서 산업연관효과가 매우 낮다는 점, 둘째는 외국기업들은 기업여건이 좋을 때는 이윤을 자유로이 본국으로 송금하면서, 여건이 나빠지면 아주 쉽사리 기업을 정리하고 철수할 수 있다는 점, 셋째는 그들에게 제공되는 각종의 세제혜택이나 보조금의 액수에 비해서는 고용창출효과가 매우 낮다는 점 등이다. 1979년의 제2차 오일쇼크 이후 세계경제의 구조적 불황이 지속되던 1980년대 초반에서 중반까지에 걸친 시기 동안에는 이같은 문제점들이 확연히 드러났다. 외국자본의 신규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기존의 외국기업들 가운데 아일랜드 공장을 정리해 버리는 기업들의 수는 늘고, 외국기업 부문의 총고용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던 것이다 (O'Malley, 1992: 38-45). 그리하여 1980년대 중엽에는 1인당 외채율이 세계 최고 수준에까지 이른 외채위기(McAleese, 1986: 27)까지 겹쳐지면서 아일랜드 경제 전반에 대한 위기의식이 잔뜩 고조된 바 있다.<sup>10)</sup>

9) 이는 EIU(1997)의 p.5에 나온 표로부터 계산한 수치임. 1990년대에 들어서는 계속해서 GDP에 대비한 수입액의 비율이 40%대에서 50%대 초반의 수치를 머물고 있지만, 1979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의 시기 동안에는 60%를 상회하기도 하였다.

10) 이 무렵에는 종속이론에 준거하여 아일랜드 경제발전 과정의 구조적 모순을 비판하는 경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아일랜드 경제는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로 들어서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고도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이같은 반전을 가능케 한 주요 배경요인 중에는, 유럽연합이 아일랜드 정부에 요구한 급진적인 재정적자 삭감 정책을 아일랜드 정부가 경제주체인 사용자측 및 노동자측의 동의를 얻어 효율적으로 수행해 내었다는 점과 1987년의 단일유럽법(Single European Act) 발효를 필두로 거대한 단일유럽시장의 창출을 위한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하는 것에 고무된 미국, 일본 등 비유럽 국가 자본들의 신규투자가 크게 증가하였다는 사실(O'Malley, 1992: 45)이 포함된다. 즉, 친유럽론자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유럽이 다시 한번 아일랜드 경제의 구원자 역할을 해준 셈이다. 그렇지만 외국자본 유치를 통한 경제발전 전략에 내재된 문제점들, 특히나 투입 자본량에 비해 매우 낮은 고용효과 및 거기서 연원하는 높은 실업을 지속—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에 걸쳐 아일랜드는 스페인에 이어 유럽연합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실업율을 지닌 나라였다—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아일랜드 정부는 1980년대 중반부터 수출부문에 종사하는 국내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도 계속적인 외자유치 정책과 병행하여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ibid: 43-46). 그 일환으로 1993년부터는 ‘카운티 기업발전 위원회’(County Enterprise Board)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국내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Tipperary North County Enterprise Board, 1994: 3). 하지만 현재의 상태로 미루어 판단하건대는, 영세한 국내기업들이 외국기업들과 같은 시장을 놓고 경쟁하기는 어렵고, 외국기업들이 손대지 않은 틈새(niche) 시장을 개척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놓고 아일랜드 경제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학자들도 있다 (예컨대, O'Hearn, 1993). 이들은 자본운동의 세계화(globalization) 단계에서 경쟁이 격화되는 추세 속에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유럽연합 중심부 국가의 자본들은 유럽의 주변부로 투자하는 것을 꺼리고 중심부 내부에 집중하는 경향이 두드러질 것이며, 또 설사 주변부로 진출하는 경우에도 아일랜드보다는 과거 공산권에 속하던 중부 및 동부 유럽의 국가들 쪽으로 진출하기를 보다 선호할 것이며, 이 점에서는 미국이나 일본의 자본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면서, 결국 외국자본의 유치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경제구조를 만들어 버린 결과로 아일랜드 경제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되리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일랜드 경제가 유례없는 번영을 구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같은 비관론에 동조하는 사람들의 수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고 있다.

끝으로, 아일랜드가 지난 30여 년에 걸쳐 추진해 온 대외지향적 산업화 전략과 그 전략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유럽연합에의 참여가 나라 지방의 수준에서는 어떠한 경제구조적 변화를 발생시켰는가를 살펴 보기로 하자. 이에 관해서는 자료가 가용한 범위 내에서 간략히 서술하고자 한다.

---

향이 흥미하였는데, 가장 대표적인 학자로는 Crotty(1986), Wickham(1986), O'Hearn(1989) 등이 있다.

우선 주목할 것은, 아일랜드 전국적인 수준에서의 산업화의 진전추세에 부합하게 니나 지방에서도 지난 30여 년 사이에 산업화가 크게 진전되었다는 사실이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니나 지방 경제활동인구의 절반 이상이 농업 부문에 종사하고 있었던 데 비하여, 현재는 그 비율이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반면, 이미 1980년대 초부터 2차산업 부문 종사자의 비율이 농업부문 종사자의 비율을 능가하여 오고 있다.

<표 3> 니나 지방의 산업부문별 종사자 구성비 변화추세, 1961-1991

년 도	1차산업 부문	2차산업 부문	3차산업 부문
1961	3,726명 (54.5 %)	1,236명 (18.1 %)	1,870명 (27.4 %)
1971	2,698명 (40.6 %)	1,930명 (29.1 %)	2,011명 (30.3 %)
1981	1,926명 (28.1 %)	2,317명 (33.8 %)	2,602명 (38.0 %)
1991	1,638명 (23.6 %)	1,928명 (27.8 %)	3,370명 (48.6 %)

\* 출처: *Census of Population* 원자료 중 Small Area Population Statistics(SAPS)

다음으로 니나 지방의 제조업 부문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유럽통합의 영향을 살펴 보겠다. 니나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8개의 중·대형 제조업체들<sup>11)</sup> 가운데서 유럽연합에의 가입의 혜택을 가장 많이 입은 것은 유가공 공장과 육류가공 공장, 그리고 농기계 공장 등 3개의 농업관련 업체들이다. 이들 중에서도 유가공 공장은 가장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일찍이 1913년에 설립되었으나 1950년대 말까지만 해도 종업원수 10명 정도의 영세업체에 불과하였던 니나 유가공 공장은, 1960년대부터 수출시장이 열리면서 규모가 확장되기 시작하였고, 유럽연합에의 가입 이후로는 공동농업정책의 지원 하에서 급증하는 니나 지방의 우수생산량을 처리하고 또 국제수준의 경쟁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규모의 확장과 시설현대화를 계속하여 왔다. 그리하여 현재는 종업원수 150명으로 유럽연합 가입 이전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규모가 커졌으며, 제품의 종류도 훨씬 다양해졌다. 이 업체 대표이사에 의하면, 생산품 중 현재는 약 85%가 수출되는 데 그 중 약 40%가 유럽연합으로, 나머지는 세계 각처로 수출되고 있다고 한다. 육류가공 공장은 1960년대 중반에 창립될 때는 니나의 주민들 몇 명이 합자하여 설립한 중소기업이었으나 1976년에 아일랜드 최대의 육류가공 및 수출업체인 Goodman Group에 의해 인수되면서 영국자본과의 합자회사로 바뀌고 규모가 팽창하기 시작하였다. 육류가공 공장의 경우는 농민들로부터 가축을 사들일 때 지불한 대금 중 상당히 큰 일부를 가공한 육류를 수출할 때—주된 수

11) 아일랜드는 매우 낮은 인구밀도와 분산적인 취락 패턴 그리고 이를 감안하여 이루어진 지방분산적인 산업화 정책 등의 요인이 복합적 작용한 결과로 산업체들의 크기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작은 편이어서, 현재에도 종업원수 100명 이상이면 공식적 분류체계 상에서 대형산업체로 분류되고 있다 (Shannon Development 1994: Appendix 6 참조).



출대상국은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이다—유럽연합으로부터 받는 수출보조금의 형태로 회수하는 만큼, 유럽연합과의 연계는 긴밀하다. 유럽연합 가입이래 니나 지방의 소 및 양사육 두수가 크게 증가하여 옴에 따라 이 공장의 생산량도 증가해 왔다. 다만, 1990년대 초에 기업주가 아일랜드 전국을 뒤흔든 대규모 재정 스캔들에 연루되었던 탓으로 규모는 이후 정체상태로서 현재의 종업원수는 약 80명이다. 농기계 공장은 유럽연합 가입 이후 가속화된 농기계화의 진전의 덕택으로 번성해 오고 있는 기업이다. 그리하여 일찍이 1947년에 설립되어 1960년대 말까지만 해도 농기계 수리업체의 성격이 더 강하였던 이 공장은, 현재는 종업원 약 75명이 일하고 생산품 중 일부를 수출까지도 하는 중견업체로 성장하였다.

이들 농업관련 제조업체들이 크게 성장하였다고는 하지만, 1960년대 이후의 니나 지방 제조업 부문의 발전과정을 주도해 온 것은 아일랜드 정부의 적극적 외자유치 정책에 힘입어 1970년대 중엽부터 도래하기 시작한 외국기업들이다. 현재 니나에는 3개의 외국 제조업체들이 가동 중이다. 이들 중 현재 종업원 규모 약 400명으로 제조업뿐만 아니라 전 산업부문을 통틀어서 니나 지방의 가장 큰 고용 주체이기도 한 Procter & Gamble 회사는 세계 각처에 약 30개에 달하는 자회사들을 가진 미국계 다국적 기업으로, 여기서는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 기업은 1978년에 처음 니나 지방에 들어 왔던 R-V Chemicals라는 회사를 1990년대 초에 인수하여 들어 왔는데, 인수 전까지만 해도 종업원 수 100명 미만이었으나, 인수 이후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이는 단일유럽시장의 탄생에 즈음하여, 이를 겨냥하여 이루어진 미국계 자본들의 투자확대 시도의 한 사례이다. 현재 이 공장에서는 ‘Oil of Ulay’라는 제품을 주로 생산하여 주로 유럽시장으로 수출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200명 남짓한 종업원이 있어 니나 지방의 제조업체 중 현재는 두 번째로 크지만, 과거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까지는 가장 큰 업체였던 Rhone-Poulenc-Rorer 사가 있다. 이 기업은 1981년 Rorer Ireland Ltd.라는 이름으로 니나에 처음 도래할 때는 순수 미국계 다국적 기업이었으나, 1990년에 Rorer사를 프랑스계의 또다른 제약 다국적 기업 Rhone-Poulenc사가 합병하면서 명칭이 바뀐 것이다. 이 합병에 이어 니나 공장에는 약 1천만 파운드에 달하는 거액의 신규투자가 이루어진 바 있다. 외국 제조업체들 가운데서는 규모가 가장 작은 Tubex Ltd. 회사는 의약품 용기로 쓰는 알루미늄 및 플라스틱 튜브를 생산하는 독일계 기업이다. 니나 지방에서는 우연히도 같은 회사 명칭으로 알루미늄 튜브를 만들던 회사가 알루미늄 그릇 회사의 창업주에 의해 1938년에 설립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1970년대 중반 이후 곤란을 겪던 중에 1978년에 동명의 독일 기업에 의해 인수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여 현재는 약 150명의 종업원이 일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니나 지방 수준에서의 산업화 과정에서도 유럽통합의 진전은 직접 혹은 간접으로 커다란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여 오고 있다. 이에 대해 니나 지방의 주민들은 유럽연합에의 참여가 제조업 부문에 있어서도, 비록 농업 부문에서만만큼

크고 직접적인 것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상당히 커다란 혜택을 가져다 준 것으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 V. 결 론

이상에 서술한 바와 같이 유럽의 통합과정의 편입은 아일랜드 농업구조가 근대화되고 아일랜드의 전체 경제구조가 근대적 산업사회의 전형에 합치하는 것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과정, 즉 아일랜드의 경제적 근대화 과정에 있어서 그같은 변화들을 가속시키는 매우 영향력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비단 경제적 측면에서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에 있어서도 유럽통합의 진전은 아일랜드 사회의 근대화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우선, 유럽통합에의 참여는 카톨릭 교회가 전통적으로 누려 오던 포괄적 영향력을 약화시켜 아일랜드 사회의 전반적 세속화(secularization) 추세를 가속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특히 가족 및 성과 관련된 도덕 문제에 대해 전통적으로 극히 보수적 입장을 견지해 온 아일랜드 카톨릭 교회의 입장을 반영하여 아일랜드에서는 피임, 낙태, 이혼, 동성애 등이 일체 불법행위로서 금지되어 왔었지만, 근년에 들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자유화(liberalization) 추세가 급진전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아일랜드가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되었다는 사실이 간접적으로뿐 아니라 직접적으로도 자유화 조치들을 촉발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해 왔다. 피임 문제의 경우, 아일랜드에서 피임기구의 판매, 제조, 수입을 사실상 전면 자유화하는 방향으로의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1993년의 일인데, 1980년대 말부터 이를 위한 캠페인을 주도해 온 한 시민운동 단체에서는, '에이즈가 확산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콘돔에 대한 판매, 제조, 수입을 법으로 금지시키는 행위는 유럽공동체 내의 다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일인 바, 이는 아일랜드가 스스로를 다른 회원국들의 조롱감으로 만드는 처사'라는 논리로 법 개정 여론을 형성해 내었다 (Ardagh, 1995: 182-4). 또한 1995년 가을에는 국민투표를 통해 마침내 이혼을 금지시켰던 헌법 조항의 개정이 이루어져,<sup>12)</sup> 이제는 아일랜드 국민들도 혼인 상태의 지속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3년간의 검증기간—즉, 별거기간—을 거치고 난 후 합법적으로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같은 헌법 개정의 여론 형성에 있어서도 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들과의 비교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였다.

동성애 문제에 관해서는 유럽통합의 영향이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났다. 자신이 동성애자이면서 당시 아일랜드 상원의원이었던 데이빗 노리스(David Norris)는,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한 아일랜드의 법률이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면서 아일랜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뒤인 1988년에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12) 당시 농촌 및 소도시 지역에서는 반대표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더블린 등의 큰 도시들에서 쏟아진 압도적 찬성표 덕택에 근소한 표차로 헌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Rights)에 다시 제소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럽인권재판소는 문제의 법률이 ‘인권에 관한 유럽 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에 따라 마침내 1993년 아일랜드 국회에서 동성애 금지법이 폐지되었던 것이다 (Ardagh, 1995: 186-8).

아일랜드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도 유럽연합에의 참여는 크게 기여하였다. 예컨대, 결혼을 한 여성은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들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전념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보는 카톨릭 교회의 보수적 입장이 반영된 공무원 임용법으로 인하여 종래에는 공무원으로 일하던 여성들이 결혼과 더불어 퇴직을 해야 했었지만, 1977년에 여성에게 취업상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법률조항에 맞추기 위해 이 규정은 폐지되었으며, 오늘날은 여성들이 결혼을 하고 난 후에도 공무원을 포함, 다양한 직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Ardagh, 1995: 205). 또한 동일노동에 대해서도 남녀의 임금차별을 인정하던 것이 아일랜드에서의 관행이었고, 아일랜드의 기업가들은 이를 옹호하였으나, 이는 유럽연합의 규정에 어긋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아일랜드에서도 남녀 동일임금이 법제화되었다 (ibid).

유럽통합의 진전은 아일랜드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민족정체성의 의미를 재해석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하여 오고 있다. 유럽연합에 참여하기 이전까지의 아일랜드인들에게는 자신들이 ‘유럽인’이라는 의식은 지극히 생소한 것이었다. 그들의 민족정체성의 의미내용은 무엇보다도 자신들을 수백 년간 식민 지배를 한 바 있는 이웃 나라 영국과의 대립관계 속에서 규정되어 왔었다. 하지만, 유럽연합에의 참여는 아일랜드인들로 하여금 새로운 각도에서 아일랜드 민족정체성의 의미내용을 규정할 수 있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그리하여 한편으로는 아일랜드인은 ‘유럽인’의 일부라는 의식을 형성해 내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의 다른 민족들과는 구별되는 아일랜드 민족의 고유한 정체성을 표현하고 강조하고자, 아일랜드의 전통적 문화예술—특히 전통음악과 무용—과 아일랜드 토착어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부활 내지 확산되고 있다.

이 밖에도 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유럽통합의 영향은 나타나고 있다. 아일랜드의 정치적 역학관계라든가, 북아일랜드 사태에 대한 아일랜드인의 태도, 노사관계, 심지어는 소비생활의 패턴에 이르기까지 많은 측면에서 변화와 적응의 과정이 지속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유럽통합의 진전에 따라 전개되고 있는 이같은 변화들에 대한 아일랜드인들의 전반적인 평가는 대단히 우호적이다. 이러한 우호적 평가의 배경을 이루는 요인은 무엇보다도 아일랜드 경제의 번영이다. 1988년이래 1994년까지 사이에 아일랜드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5.25%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유럽연합 평균치의 세 배에 이르는 성장률이다 (Ardagh, 1995: 92). 특히나 1995년에는 10.3%라는 사상 초유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

고, 1996년과 1997년에도 모두 8.6%씩의 고도성장을 달성하였다 (EIU, 1997: 5; Eurostat, 1998).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은 유럽연합 평균치의 절반 수준이고, GNP 대비 국채의 비율도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으며, 국제수지 흑자가 계속 증가하고, 총고용규모도 증가하며, 이민을 나갔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되돌아오는 역이민 추세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조금씩이나마 낮아지는 등 다른 경제관련 지표들도 거의 모두가 청신호를 나타내고 있다 (EIU, 1997 참조). 이같은 번영의 결과 실질 생활수준도 크게 향상되어 구매력 표준(PPS)으로 환산했을 때, 1993년에 이미 아일랜드의 1인당 국민소득은 유럽연합 평균의 80%에 이르렀다 (Eurostat, 1995: 18-9의 표로부터 계산). 이는 1970년에 61.2%, 심지어 1985년에만 해도 64.2%에 불과했던 것(NESC, 1989: 표 5.12)에 비한다면 대단한 향상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변화를 보면서 종래에는 유럽연합에의 가입의 경제적 영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던 사람들 중에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긍정적인 평가로 돌아선 실정이다. 물론 아직도 회의론 내지는 신중론을 펼치는 학자들도 있다. 이들은 근년의 고성장이 단일 시장의 발효에 즈음하여 유럽연합 측에서 이른바 응집(Cohesion) 정책, 즉 낙후지역들에 대한 각종 구제기금의 지원을 통해 이들 지역의 사회간접자본과 인적 자원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서 대규모의 기금이 아일랜드에 지원된 덕택—아일랜드 정부에서 간행된 문서들도 유럽연합으로부터의 지원금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효과만 해도 경제성장률 0.5% 내지 1% 가량에 달한다고 추산하고 있다—일 뿐이며, 계속되지는 않으리라고 전망한다. 이들은 덧붙여 유럽연합으로부터의 지원에 대한 이같은 높은 의존이 아일랜드인들에게 “동냥바가지 심성”(begging-bowl mentality), 즉 모든 일을 유럽으로부터의 지원에 의지하여 하려는 태도를 만들어 놓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같은 견해를 지닌 사람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유럽연합에의 참여가 가져다 준 가족 및 성과 연관된 도덕의 영역에서의 자유화의 증대와 여성의 지위향상은 젊은 세대와 여성들을 대부분 친유럽론자로 되게 하였고, 유럽에의 참여에 따른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의 사회헌장(Social Charter)에 의거한 노동자의 권익보장을 위한 각종의 제도적 장치들이 노동자들에게도 유익하다는 판단을 내리는 아일랜드 노동조합운동의 지도부도 역시 친유럽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문화적 영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변화들은 아일랜드의 문화적 민족주의자들까지도 친유럽론자들로 바꾸어 놓았다. 그래서 만약 현 시점에서 유럽연합에 대한 찬반투표가 이루어진다면, 아마도 1982년의 83%보다도 훨씬 높은 찬성율이 나올 듯하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1990년대 중반의 시점에서 볼 때 아일랜드인들 대부분에게는 자신들은 ‘유럽인이면서 동시에 아일랜드인’이라는 자신에 찬 민족정체감이 상당 정도 형성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참 고 문 헌

## (가) 일차 자료

- Census of Population*. 1926 - 1991. Dublin: Central Statistics Office.
- Statistical Abstract*. 1995. Dublin: Central Statistics Office.
- The Guardian*. Nenagh: The Nenagh Guardian Ltd (나라의 지방신문).
- Department of Agriculture, Food and Forestry. 1995. *Schemes and Services, 1995*.
- Government of Ireland. 1993. *Ireland: National Development Plan, 1994-1999*. Dublin: Stationery Office.
- \_\_\_\_\_. 1995. *Facts about Ireland*. Dublin: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 Shannon Development. 1994. *Enterprise Development Strategies 1994-96: Tipperary (N.R.)*
- Tipperary North County Enterprise Board. 1994. *Annual Report 1994*.

## (나) 이차 자료

- 장 흥. 1994. 『유럽통합의 역사와 현실』. 서울: 고려원.
- Ardagh, John. 1995. *Ireland and the Irish: Portrait of a Changing Society*. Harmondsworth. Middlesex: Penguin Books.
- Arensberg, Conrad. 1937. *The Irish Countryman: An Anthropological Study*. London: Macmillan.
- Arensberg, Conrad & Solon T. Kimball. 1940. *Family and Community in Ireland*.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arnes, Ian & Pamela M. Barnes. 1995. *The Enlarged European Union*. London: Longman.
- Breen, Richard. Damian F. Hannan, David B. Rottman & Christopher T. Whelan. 1990. *Understanding Contemporary Ireland: State, Class and Development in the Republic of Ireland*. Dublin: Gill and Macmillan.
- Brunt, Barry. 1988. *The Republic of Ireland*. London: Paul Chapman Publishing Ltd.
- Commings, Patrick. 1995. "The European Community and the Irish Rural Economy." In *Irish Society: Sociological Perspectives*. (eds.) P. Clancy, S. Drudy, K. Lynch & L. O'Dowd. Dublin: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Crotty, Raymond. 1986. *Ireland in Crisis: A Study in Capitalist Colonial Underdevelopment*. Dingle. Co. Kerry: Brandon Book Publishers Ltd.
- EIU(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1997. *Country Report: Ireland; 1st Quarter*

1997. London: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Ltd.
- Eurostat. 1995. *Europe in Figures*. (4th Edition) Brussels: Eurostat.
- \_\_\_\_\_. 1998. *Eurostatistics* (April, 1998). Brussels: Eurostat.
- Foster, Roy F. 1989. *Modern Ireland, 1600-1972*. Harmondsworth. Middlesex: Penguin Books.
- Gibbon, Peter. 1973. "Arensberg and Kimball Revisited." *Economy and Society* 2: 479-98.
- Goldthorpe, John H. & Christopher T. Whelan. (eds.) 1992.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Society in Irela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annan, Damian F. 1982. "Peasant Models and the Understanding of Social and Cultural Change in Rural Ireland." In *Land, Politics and People* (Irish Studies 2) P.J. Drudy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nnan, Damian F. & Patrick Commins. 1992. "The Significance of Small-scale Landholders in Ireland's Socio-economic Transformation." In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Society in Ireland*. (eds.) J.H. Goldthorpe & Christopher T. Whela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70-104.
- Hwang, Ik-joo. 1992. *Class, Religion, and Local Community: Social Grouping in Nenagh, Republic of Ireland*. Ph. D. thesis. University of Oxford.
- Lee, Joseph J. 1989. *Ireland 1912-1985: Politics and Socie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yons, F.S.L. 1973. *Ireland Since the Famine*. London: Fontana Press.
- McAleese, Dermot. 1986. "Ireland in the World Economy." In *Ireland in Transition: Economic and Social Change Since 1960*. (ed.) Kieran Kennedy. Cork & Dublin: The Mercier Press.
- NESC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Council). 1989. *Ireland in the European Community: Performance, Prospects and Strategy*. Dublin: NESC.
- \_\_\_\_\_. 1992. *The Impact of the Reform of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Dublin: NESC.
- O'Hearn, Denis. 1989. "The Irish Case of Dependency: An Exception to the Exceptio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4). pp.578-96.
- \_\_\_\_\_. 1993. "Global Competition, Europe and Irish Peripherality." *The Economic and Social Review*. 24(2). pp.169-97.
- O'Malley, Eoin. 1992. "Problems of Industrialisation in Ireland." In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Society in Ireland*. (eds.) J. Goldthorpe & C. Whela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31-52.
- Scheper-Hughes, Nancy. 1979. *Saints, Scholars, and Schizophrenics: Mental Illness in Rural Ireland*. Berkeley & L.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hutes, Mark T. 1991. "Kerry Farmers and the European Community: Capital Transitions in a Rural Irish Parish." *Irish Journal of Sociology* 1: 1-17.
- Wickham, James. 1986. "Industrialisation, Work and Unemployment." In *Ireland: A Sociological Profile*. (eds.) P. Clancy, S. Drudy, K. Lynch & L. O'Dowd. Dublin: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pp.70-96.
- Wilson, Thomas. 1984. "From Clare to the Common Market: Perspectives in Irish Ethnography." *Anthropological Quarterly*. 57(1). pp.1-15.

## IRISH RESPONSES TO THE PROGRESS OF EUROPEAN INTEGRATION

Ik-Joo Hwang

*Department of Anthropolog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Republic of Ireland joined the European Union in 1973. The EU membership has brought about radical changes in almost all aspects of life as the process of the European integration progressed over the years. This study examines such changes and the Irish responses to them focusing on Irish economic structure.

Agriculture is the sector where the impacts of the European integration has manifested themselves in the most direct and profound way. In a word, the joining of the EU and receiving the various benefits of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CAP) was a decisive factor in the modernization of Irish agriculture. Although there exists the problem of Irish small farmers who have been the losers in this modernization process, various EU structural policies and the direct subsidy schemes introduced as a result of the 1992 CAP reform have been functioning as a buffer against rapid demise of Irish small farmers.

To join the EU was a move in line with the externally oriented economic development and industrialization strategy which Ireland has pursued since the late 1950s. The EU membership has been an important factor for the rapid Irish industrial development. Europe has become the largest source of foreign capital as well as the biggest market for Irish industrial products, thereby rendering Ireland to be able to overcome their traditional dependence on Britain. On the other hand, however, the EU

membership has contributed to the deepening of the foreign dependence of Irish industrial sectors.

The overall Irish economic development for the last three decades which owes a great deal to the progress of the European integration and especially the extremely high economic growth rate during the 1990s, as well as the various progresses in sociocultural aspects of Irish life which the EU membership have brought about, have made the great majority of contemporary Irish people pro-European. They can now say with confidence, "We are European and Irish at the same time."